

외국인 노동자에게 너무 높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만료 다가와 이직하려 했는데 사장이 동의 없이 계약 연장 불법노동행위 호소 외면...한국인 변호사 등 동행하자 5분만에 해결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 대우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호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 근로계약 연장,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해도 정작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불법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결국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가을 한마당’이 열린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 출신인 A씨는 진도에서 광주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3년째 근무하고 있던 사업체에서 불법 노동행위를 당해 목포 고용노동지청 소속 목포고용센터에 지난달 3차례나 찾아갔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였다.

A씨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업체 대표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대표는 A씨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작성하고는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신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탈신고를 당하면 전산망에 기록이 남으며, 다른 사업장에 등록이 안 돼 불법체류자가 된다.

A씨는 “센터 직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통역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의사소통이 잘 안돼 도와주기 어렵다는 반응만 보였다”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을운동회까지 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한국인 변호사 등이 함께 센터를 찾아가자 단 5분만에 문제가 해결됐다.

A씨는 지난 4일 민중의집 변호사 등 도움을 받아 센터를 재 방문했는데 고소장 작성부터 임시 사업장 변경 허가필증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계약서 상 법적 다툼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임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행한 한 노무사는 “급하고 복잡한 사건인

줄 알고 당일날 급하게 목포고용센터를 찾았으나 5분만에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사안이라 허탈했다”고 말했다.

목포고용센터 관계자는 “A씨가 2번 정도 방문한 것 같다. 절차대로 안내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통역시스템도 미흡하다 보니 노동상담 자체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A씨 방문 당시 센터에는 인도네시아 통역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절한 용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는 현재 영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국가 별로 1명씩 총 4명의 통역사가 고용돼 있으며 1주일에 2번, 하루 3-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있는 통역가들은 전문 노무지식이 없어 한국말을 단순히 통역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과 노무사들은 “전화로만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

난해 8월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임금체불을 신고하려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진정서 취하를 강요한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이 노무사들의 이야기다.

광주전남이주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동자 B씨와 C씨는 지난해 7월 19일 여수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9년부터 여수의 한 수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장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근로감독관은 B씨와 C씨에게 “사장이 사업장변경에 동의를 해준다면, 못 받았다는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진정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내용은 지난해 8월 3일 진행된 진정인 조사 조서에 그대로 담겼다. B씨와 C씨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통역조차 받지 못한 채 한국어로 쓰인 진정취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에 참여한 민주노동법률원 홍관희 노무사는 “한국사람도 설명하기 어려운 노무사건을 전문 지식이 없는 통역가들이 제대로 통역하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의사소통만 된다고 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통역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5살 조카 폭행치사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형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조카 B(5)양을 유리창뒤에 막대로 여러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영당어와 종아리를 때리고 기합을 주며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처벌을 인정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아이가 자주 거짓말을 해 혼혹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처벌 한계를 넘어선 학대라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5년새 전동킥보드 사고 33배 ↑ 전국 최고

전남 2017년 0건→2021년 47건

광주에서 최근 5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고가 33.3배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연구원(경기 이천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5년 사이 14.8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4명→2021년 19명으로 4.8배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2017년 124명→2021년 1901명으로 15.3배 폭증했다.

광주는 2017년 3건(부상 4명)에서 2021년 100건(부상 116명)으로 33.3배 증가해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남은 2017년 사고 건수가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47건이 발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동킥보드 관련 위법행위 단속 건수도 폭증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단속한 결과 20만 542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7만 3631건, 올해는 9월 말까지 13만 1789건이 단속돼 하루 405건꼴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모 미착용이 15만 8935건(77.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2만 2743건(11.1%), 음주운전 9041건(4.4%), 승차정원 위반 1359건(0.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7년 491건→2019년 1927건→2021년 6207건으로 5년 사이 1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42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류 인플루엔자 막아라” 방역 작업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0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영산강 일대에서 철새 도래 시기를 대비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혼자 캠핑 40대 숨진 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변 당한 듯

추운 날씨속 캠핑족들이 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캠핑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캠핑장 관리인은 이용시간이 끝났음에도 텐트가 철거되지 않아 텐트 안을 살펴보다 숨진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엎드린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번개탄을 사용해 요리한 뒤 번개탄을 끄지 않고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하루 50통 전화·문자 폭탄...의사 스토킹 50대 여성 집유

본인의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하루에 50통씩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3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50대 여성이 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

찬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내려졌다.

A씨는 환자로 알게된 의사 B(61)씨에게 지난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7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 3시에도 연락을 하는가 하면, 하루에 50회의 연락을 한 적도 있으며 5일간 연달아 100여 차례 연락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바)</p>	<p>● 월수익-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010-6670-9800		010-2614-9801